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유지나



‘자전거 도둑’(1948)을 기억하는가? 한국인이 다시 보고픈 명화로 꼽는 ‘길’과 더불어 거론되는 이탈리아 영화다. 전후 피폐해진 이탈리아, 실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든다. 주인공은 어렵사리 일을 얻지만 자전거가 필수다. 그는 전담포에 침대보를 잡혀가며 어렵사리 구한 자전거를 신주단지처럼 모신다.

그런데 벽보를 붙이다 한눈판 사이 누군가 짝짝이 자전거를 훔쳐간다. 그는 자전거를 찾기 위해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종일 거리를 헤맨다. 지쳐버린 그는 아들을 멀리 두고, 홀로 남의 자전거를 훔친다. 그러다 발각되어 군중에 둘러싸여 망신당하는 장면을 아들에게 들리고 만다. 흑백화면 가득히 번져 나오는 비애감은 생각만 해도 처절하다.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은 이렇듯 아이들이 어른들 세상을 관찰하며 보는 치명적 상처를 기막히게 포착해낸다. 이 영화 직전에 만든 ‘아이들이 보고 있다’(1944)에서는 제목 그대로 소년 프리코가 지켜본 어른들 세상을 드러낸다. 부모와 친척 모두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사모되지만 철학 없는 인생관을 드러낸다. ‘어린 것이 될 앞

졌어’ 같은 어른들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최근 아이들을 둘러싼 사태를 보노라니 데 시카의 영화들이 마음 아프게 떠오른다. 이를테면 지난 5월 OECD에서 조사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에

## 누가 아이들을 죽이는가?

서 한국은 꼴찌를 했다. 한국이 자살률 평균수치의 2배로 1등이라는 점과 어우러진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26위로 행복지수 하위권 어른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진단은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한류를 유럽까지 몰고 간 ‘소녀시대’가 애국적 존재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연예인을 스펙터티식으로 양성하는 한국형 기획시스템이 유럽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질투하기 때문이 아니라 넘겨버리려는, 심각하게 불행한 사태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 17일 공

정거래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조항’을 사상 최초로 삽입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발표했다.

십대 아이들을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 숙면과 의무교육조차 불가능한 일정을 강요하고 ‘하의실종’ 복장으로 노래하고 춤추도록 짜인 이 놀이판은 누가 돌리는 것일까? 이들의 인기와 흥행으로 이윤을 도모하는 반문화적인 어른들이다. 물론 이 판에 가담한 아이들의 스타 판타지를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살벌한 사회에서 명문대를 안 나오고도 잘 살아내려면 스타가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어른들이다. 다수 멤버가 등장하는 ‘하의실종’ 걸그룹을 보면서 마치 뷔페에서 음식 고르듯이 누가 더 섹시한지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십대 여성 연예인 지방생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강요로 인한 노출촬영 경험을 밝히고 있다. 걸그룹들 멤버수의 증가는 한두 명이 빠져나가도 그룹 유지에 좋은 전략이다.

그런 현상을 선택폭의 확대로 받아들이는 오빠부대, 삼촌부대 팬클럽의 지지는 또 뭔가? 심지어 평균연령 9.75세인 걸그룹 지스토리도 지난해 나왔다. 아이들이

어른용 놀이감으로 삼는 이런 반인권적 사태는 연이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열린 ‘진주는개제’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왜장 인형을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체험 이벤트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매운 총질 반듯하게!’라는 주제하에 전통예술체험을 내걸고 21세기 여자 아이들에게 전통 기성 따라하기 재현극이라니! 지역 홍보, 애국정신 같은 명분을 내걸고 이런 것을 문화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살아야 한다. 더 큰 아이들은 돈 없어도 공부할 권리를 외치며 등록금 반값을 걸고 거리로 나선다.

대체 우리를,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물질이 곧 행복이라는 주면에 걸려 체면처리기형 어른으로 살면서 ‘스타 되기’, ‘명문대 가기’를 인생 가치관으로 유도해온 것은 아닐까?

그때도 나는 희망을 갖는다. 시위문화를 놀이문화로 바꿔놓은 촛불세대의 창의성과 호모루덴스형 일상이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문제다. 물질은 가치로 바뀌어 어른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자녀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공부를 강요하는 어른들, 아이들을 이용해 물질을 얻으려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아이들의 불행과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현실화되는 전남 ‘공동화 재앙’ 대책 있는가

전남의 ‘공동화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든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91만 명을 겨우 넘었다. 이마저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 불명 등록자를 제외하면 실제 거주는 189만8842명이다. 인구 190만 명 선도 무너진 셈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구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년5개월 새에 무려 1만4844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고령화를 촉진해 지난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4%에 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지난 88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불과 15년 만의 일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으로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전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성장 산업 동력을 갖추지 못해 쇠락해 가는 전남에서 젊은 층의 이탈은 성장 동력 기반마저 약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활력을 잃고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늘어가는 사회는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난제를 예고한다. 대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의 청년층 유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교육 활성화’ ‘지역 인제 할당제’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으로 늙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 광주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별로 없다니

광주에서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으나 외국인은 물론 참가자 수가 턱없이 적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회의를 포함한 전시·컨벤션 등의 개최도 잦았지만 참가자 수가 적어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광주에서 72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돼 2008년 3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으나 참가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가 51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한다. 외국인 참가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도 59건으로 82%에 달했다.

국제회의의 1건 당 외국인과 전체 참가자 수가 46.3명과 323.7명으로, 전국 평균 154.2명과 619.4명에 비해 각각 3분의 1,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회의, 전시 등의 개최 건수도 광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7대 광역시 중 3위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전체 참가자 수는 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별로 없고, 각

종 회의 및 전시 등에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니 그야말로 실속없는 행사를 치른 셈이다. 참가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에 숙박이나 음식 등 관련 지역산업으로의 연계 효과는 당연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서 광주시나 관련 단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외국인 참가자가 40여명에, 일반 참가자도 300여명선이라면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적자회의’를 치렀다는 얘기가.

광주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수 올리기의식 ‘겉치레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을 위해 회의, 전시 등의 투자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전시 컨벤션산업의 육성도 이 시점에서 다시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과 전체 참가자가 전국 평균의 30% 내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NGO 칼럼



박시훈

5년 전, 광주에서 제대로 된 대한학교를 만들어보고자 했다. 광주가 도시고 광주 안에서 하고자 했으니 말 그대로 도시형 대한학교다. 하지만 기속형은 싫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부모와의 일상적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 갖춘 형태도 싫었다. 학교 세울

비용도 없거나 학교 시설과 공간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광주를 학교로 이용하는 게 진정한 교육일 듯 싶었다. 광주는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사회 자원이 다 있고 잘 활용하면 될 일이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 또 들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교육 고민으로 시작한 일은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기 문화예술교육, 문화 행사 기획, 마을 만들기 진행,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까지, 일반 학교를 지나 자연스럽게 문화자원으로, 마을로, 도시로 확장해 갔다. 그래서였을까?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도시형 대한학교를 열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대로 영영 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이제 크게 중요치 않다.

## 광주는 보물섬

광주는 이전엔 알지 못한 소중한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월봉서원이 그랬고 의재 유적이 그랬다. 무등시장이 그랬고, 화정동이 그랬다. 그것들의 새로운 이야기나 지식, 정보도 얻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통해서 ‘광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설렘과 경계, 오해와 화해, 즐거움과 기대, 상처와 치유 등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개인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서일까? 최근 관심거리는 광주 보물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흘러 간다. 과거 있었는데 없어졌다거나 일종의 광주 정신, 광주학 같은 것들에 관심이 간다.

임동, 유동 지방의 유래인 유림숲의 장관이 궁극하고, 금남로 확장공사 때 잘려나간

400년 된 왕버드나무가 보고 싶다. 없어지지만 않았던 도심에 힘과 활력을 넣어줬을 경양방죽도 나누고 싶고, 비린내 나는 남광주역사도 그렇다. 뽕뽕다리로 다시 건너고 싶고, 도로로 덮기 이전 광주를 흐르던 작은 천들도 건너고 싶다. 조선시대 소쇄원을 중심으로 부흥했던 계산공부도 누려보고 싶고,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마을 교과서를 교재로 광주학 수업이 진행되는 꿈을 꾀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이에서도 광주 관광산업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나 볼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하겠는가?

광주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 많다. 서울에 가도, 전세계 어느 곳도 그 맛을 알 수 없는 보물들이다. 부디 다들 광주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잘 닦아서 서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사무국장>

## 기고



오병현

광주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모두 1조2830억원을 투자해 37.66km의 제2순환도로를 착공했다. 지하철 1호선, 광역위생매립장, 월드컵경기장, 신청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들이 같은 시기에 공사에 들어갔고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3개 구간 13.75km를 민자사업(투자비 4707억원)으로 시행했다.

이 도로로 인해 도심광공주행속도가 2000년 6대 광역시 중 최저인 21.1km/hr에서 2009년 6대 광역시 중 최고인 33.1km/hr로 개선됐다. 생산·유통·물류비용이 절감되

###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해법찾기

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민자사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협약 당시 도시지표와 경제여건 등이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민간사업자에게 2010년 222억원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불했다. 또 앞으로도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순환도로는 속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민간사업자와 법인세 인하요율 반영, 자금 조달도 계획, 요금수 통행방법 개선, 운영권 회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재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조달(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본인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

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을 통한 공유이익 분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고 광주시 역시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해법을 모색했던 자금조달 제도는 지난 2004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최초 도입 규정된 바 있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관청의 동의를 얻어 자금조달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와 주주관청이 원칙적으로 50대50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4명, 공무원 5명으로 하는 재정보전경감관련 협상 T/F를 구성하고 2011년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법인세 등 일부 사항은 수용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실시협약 변경 의무가 없고 자금조달 여부

행사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거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사업시행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법적 성격이 아니며, 실시협약체결 이후 변경된 현행 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조달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해외자본,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사업자와 그들이 고용한 국내 최대 로펌과의 법정 다툼은 막대한 변호사비용, 패소했을 때의 부담 등의 여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자금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지난 17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전문변호사와 회계사와 대응하는데 시의외, 시민단체, 지역인론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광주시 도로과장>

### 원손잡이용 생활용품 확대 정부가 나서야

원손잡이인 아이가 자리면서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원손으로 필요한 모든 걸 해왔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고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위 등 생활필품이나 공구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원손잡이라 점을 너무나 불편해 했다.

최근에는 색종이로 동물모양 만들기 숙제를 하다가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내용당치더니 원손잡이용 가위를 사달라고 떼를 썼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원손잡이용 가위를 사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다. 그런데 원손

잡이용 물건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많이 개선돼 왔다. 장애인 단 한 명이 입학하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멋진 민원을 들어 계단을 휠체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면 공사 등을 한다. 당연한 일이고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원손잡이에 대한 생활도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장애인 정책차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내에는 원손잡이가 10%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내 업체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손잡이용 생활공구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주길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바란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오른손잡이용으로만 되어 있는 과학도구나 일상생활용품 원손잡이들에게 맞게 비치해 두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루동

## 無 等 鼓

전세계에서 당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 오는 7월 1일 창당 9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모택동의 강력한 카리스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문화혁명이라는 암흑기를 거처기도 했다.

13억 중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다. 우리나라에서야 대학이려면 총장이 넘어가지만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학의 인민위원회(공산당) 서기가 첫 번째요, 행정실장이 그 다음이며 총장(일반적으로 교장으로 지칭)은 넘버 쓰리다. 중국사회에서 공산당과 당원의 파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중국 공산당을 창당할 당시 모택동을 비롯한 13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당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이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항일할 동으로 기반을 닦고, 농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당의 내전 끝에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모택동의 강력한 카리스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문화혁명이라는 암흑기를 거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덩소평의 개혁 개방이라는 대전환점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학의 인민위원회(공산당) 서기가 첫 번째요, 행정실장이 그 다음이며 총장(일반적으로 교장으로 지칭)은 넘버 쓰리다. 중국사회에서 공산당과 당원의 파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중국 공산당을 창당할 당시 모택동을 비롯한 13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당시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이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항일할 동으로 기반을 닦고, 농민과 노동자의

### 중국 공산당



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는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이른바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통해 국가를 G2의 반열에 올린 원동력도 바로 공산당이었다. 중국사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빈부·지역격차와 민족·세대 갈등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 관측이다. 당장 한반도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실감할 바 있다. 9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의 거취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셈이다. /특약기자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신문주간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매체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제 1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제 2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제 3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제 4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광고이케팅국	2200-649	독자서비스국	2200-551
다 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